

4 낚시단체들의 목소리

낚시인도 시민으로서 수변공원 이용 권리 있다

정연화 (사)한국낚시진흥회 회장



수변공원 낚시금지는 낚시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처사다. 수변공원의 조성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 및 도시생활에 기여하고,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휴식 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수변공원의 낚시 금지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방해하고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수변공원을 만든 기본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변공원은 600만 낚시인의 혈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낚시만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놀이문화인 낚시를 규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낚시인들이 상호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수변공원의 낚시금지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수변공원을 낚

시인들이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낚시하던 곳을 막게 되면 당연히 낚시인의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낚시인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라는 점을 필히 상기해야 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시적인 표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수변공원에서 낚시를 금지하는지 낚시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낚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면서 항상 낚시인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변공원에서의 낚시금지 사유가 쓰레기나 무질서한 주차문제 등이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인들과 협의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상호 노력해나가야 한다. (사)한국낚시진흥회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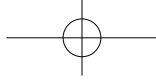
지자체에 제시할 낚시터 쓰레기 대책 마련해야

김동현 (사)한국낚시연합 회장

최근의 낚시터 공원화 진행으로 낚시가 금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낚시업계와 낚시인 모두 우려하고 있다. 낚시금지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외부에서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특정 저수지를 낚시금지 시킬 때는 뭔가 근거를 들게 돼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다. 주민들로부터 낚시인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의견

을 수렴한 후 '민원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낚시를 금지하게 됐다'고 발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낚시인 몇 명 또는 낚시단체장 몇 명이 해당 지자체를 항의 방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낚시춘추에서 수변공원 낚시금지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풀어나갈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낚시계가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낚시계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낚시인들의 행복추구권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이 함부로 낚시금지 조치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유력 인사, 즉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낚시계 편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단체, 조구업체, 각 단위 낚시회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낚시계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 줄 로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동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또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자원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모든 정치적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항의 전화 몇 통 하고 단체장 한두 명이 방문하는 순진한 방법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낚시계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낚시터 쓰레기가 극히 일부 낚시인과 놀이객의 소행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낚시계에서는 어떻게 낚시터 쓰레기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낚시단체가 지자체의 낚시행정 파트너로 적극 나서야

이춘근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낚시연합회 회장



친수공간을 활용한 국민의 생활 향상 시설이 늘어가고 그곳에 수상스키, 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 레저스포츠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독 낚시만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

전거도로, 산책로 등엔 많은 시설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부당하게 낚시만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배경엔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자체나 주민들이 낚시인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과 달리 도심의 수변공원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유대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낚시인을 대표하는 낚시단체가 펼쳐야 할 주요 업무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관할의 낚시터와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낚시 주체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쉽게 낚시금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낚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사실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낚시대화와 같은 행사가 열릴 때 초청해서 낚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낚시축제를 견학시켜 낚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변공원에서 소외됐던 낚시인의 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단체는 서울시와 이러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낚시인을 위한 낚시시설 확충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 5억 예산을 지원받아 작년 9월 낚시경기장을 건립했으며 올해는 반포지구 서래벌 셋강에 600석 규모의 낚시공원을 건립했다. 또한 57km의 한강 낚시금지 구간을 10%로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시대는 변해서 낚시도 예전과 달리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먹는 낚시에서 즐기는 낚시로 바뀌고 있고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알 수 있듯 관광상품으로서도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켜 지자체의 낚시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